

與 “尹 구속, 법 원칙 무너져”…野 “불법폭력, 엄중 처벌”

與 “尹 증거인멸 우려 판단 잘못돼
李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야”
野 “李, 사법 절차 따라 과정 진행 중
법원 난동 가담자·선동자 발본색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되자, 여당은 침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으며 ‘법원 난동’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극우 지지자들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은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

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극우 지지자의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후 기자들과 만나 “새벽에 벌어진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

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 출석 80일, 800시간 이상의 재판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처리 후 관저에 칩거해 경찰의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구속영장 1차 집행 시도도 저지했다는 점을 비교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불법 폭력 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법원 습격한 극우 지지자…尹 여론전 결과

공수처 차량 파손, 경찰관 등 폭행
윤상현 ‘훈방’ 발인, 폭동 조장 논란
尹·與 “폭력 안 돼”…사태에 선 그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인 것이다. 게다가 극렬 지지자들은 전날(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진이 탄 차량을 습격해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벌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경찰이 소지하던 방패나 의자 등을 이용해 유리창을 부셨고 3시21분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내부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은 결국 오전 3시32분쯤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했고,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공덕역 인근에서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고, 차 앞 유리에는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STOP THE STEAL (부정선거 관련 구호)’ 등의 손팻말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차 문 손잡이가 부서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차량이 파손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관 일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등의 사태에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이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공수처 수사 및 체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포 직전과 직후에도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이라며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2021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벌어진 ‘1·6 의사당 사태’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결과에 불복했고,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동한 결과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였던 태도와 흡사하다.

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는 어제 저녁 월담”이라며 “경찰이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극우 시위대는 ‘훈방’ 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 하다.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밤 서울서부지법 앞 현장에서 “우리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침탈자들이 훈방된다고 안심시켰으니 이것이 습격 명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윤상현 의원과 연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했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폭력 사태 직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종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줄 당부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지지율 정체에 중도층 공략 5대 은행장 만나며 민생·경제 행보

보수 결집 일어나며 지지율 정체 현상
상생금융 방안 논의, 추경안 편성 요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며 중도층 포섭을 노린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온 결과, 민주당은 지지율 정체 국면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조사(표본오차는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4%를 기록해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로 소폭 앞섰으나, 이번주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두 자릿수 포인트 이상으로 벌리며 ‘반(反)윤석열’ 여론을 결집하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탄핵심판 탄핵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거명 논란’,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적법성 논란’을 겪으며 보수 결집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내수 경기 부진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 경기 침체를 가중할 것으로 보고 민생·경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이번 5대 은행장과의 만남이 한국거래소나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등에 이은 민생 탐방 차원의 행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권 관계자에게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민생경제회복단도 20일 민생입법과제를 내놓고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

지난달 출범한바있는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사진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페덱스 성범죄방지법을 10대 입법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민생경제회복단은 정부에 추가 경정예산(추경안)안 편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최소 추경 요구 금액은 약 20조원에 이른다. /박태홍 기자